

우리의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정부개혁]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 3.0 시대)가 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공개 · 공유 · 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겠습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보다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추적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는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대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조세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새누리의 진단

-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방은 제한적임.
- 다양한 통계 데이터, 행정정보 및 정부의 지식자원들이 국가의 미래전략 및 위기관리 등 고부가가치 정책 기반으로 활용되지 못함.

새누리의 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새누리의 실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개인별 맞춤형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새누리의 진단

- 복잡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정부 내 협업을 저해
- 국민이 개별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 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
 -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
-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
 - 개인별 지식 및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
-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데이터 거버넌스 :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의 일관성, 시의성 및 사용권한 등 기본원칙과 프로세스의 의사결정체계
-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새누리의 실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국무회의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새누리의 진단

- 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 및 정책 책임성이 미흡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 받음.
- 세종시 이전, 집권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최소개편 원칙 하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정부조직 개편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
-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 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 장관제’ 확립
-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새누리의 실천

- 「정부조직법」 개정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새누리의 진단

- 과거 감사원,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 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
- 도덕적 해이·부정, 사업타당성 검토 오류, 중복·과잉투자, 선심성·과시성 행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수의 계약 등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새누리의 약속

-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 증가에 필요한 자원 마련
- 세출구조조정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고 의무지출·재량지출을 구분한 총량제한 등 시스템에 의한 세출절감 정책 추진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임
-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민자투자사업의 미래 재정부담 사전 공개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합리화

새누리의 실천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조세정의의 확립

새누리의 진단

- 소득격차의 확대로 국민들의 조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보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방안만 난무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2%~28.8%로 개도국 평균 30.0%보다는 작지만 선진국 평균 14.0%에 비해 매우 큼.

새누리의 약속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
-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
- 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

새누리의 실천

-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새누리의 진단

-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하여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할 필요
- 최근 비과세·감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하지 못하는 것은 느슨한 관리체계, 수혜집단의 반발, 다른 지원대상과의 형평성 등 때문

새누리의 약속

-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새누리의 실천

-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새누리의 진단

- 공기업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부족

새누리의 약속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 결산 기능의 연계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강화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새누리의 실천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새누리의 진단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 자체사업과 정부 대행사업의 구분 노력이 없어 경영 책임성 저하

새누리의 약속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행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강화

새누리의 실천

- 경영평가제를 성과협약제로 전환
-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